

## [ 종합·해설 ]

## “盧 임기단축 카드 꺼낼까” 촉각

정치권 “개헌 살리려 또 승부수 가능성”

중·대선거구제, 거국내각 제안 할 수도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와 한나라당의 개헌 절대 불가 입장이 맞물리면서 개헌 정국을 둘러싼 갖가지 시나리오가 떠돈다. 특히, 정치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물론 임기를 단축하는 극단적인 승부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임기 단축론이다.

노 대통령이 밝힌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대통령직을 사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인 내용이 골자다. 개헌안 밖의 국회의원은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의 우세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선 판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직 사퇴 이후 정국은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형성되면서 여권은 결집되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분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개헌이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임하지 모른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큰 무기가 되므로 대통령은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여권은 임기단축설에 대해 과도한 상상력이라며 노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다하겠다”고 밝힌 만

큼 임기단축론은 소설 속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정치 신념으로 밝혀온 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

당장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 와중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총선에서도 승리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시점에서 대선 전망이 불투명

한 여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 조순영 의원은 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에 대해 “가장 유력한 것은 임기단축이고, 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결론에 제안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요인 및 현법기관장인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노 대통령 일방으로서 임채정 국회의장, 한명숙 총리, 이병완 비서실장,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 국회의원 55% “현정부내 개헌 처리 힘들다”

개헌 찬성 51% -반대 36%

여야 의원들은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과반수를 공감했지만, 참여정부 임기 중 개헌안 처리가 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연합뉴스가 10일 여야 국회의원 296명 중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다.

노 대통령의 임기 4년을 9, 10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 개헌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나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139명의 56.1%인 78명, 한나라당 의원 127명의 53.5%인 68명,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 30명의 53.3%인 16명이 참여했다.

◇ “임기중 개헌안 처리 힘들다” =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의원의 51.2%인 83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36.4%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2.3%인 20명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67%의 찬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51.2%의 찬성을 이같은 의결 절차수에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현상태로만 놓고 볼 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음을 드러냈다.

### ■ 4년 연임제 개헌 국회의원 설문 결과

구분	찬성	반대	우보	총 응답자
열린우리당	71명(91.0%)	1명(1.3%)	6명(7.7%)	78명
한나라당	4명(5.9%)	53명(77.9%)	11명(16.2%)	68명
민주당	5명	3명	1명	9명
민주노동당	1명	2명	2명	5명
국민중심당	1명	-	-	1명
무소속	1명	-	-	1명
계	83명(51.2%)	59명(36.4%)	20명(12.3%)	162명

### ■ 개헌안 발의시 실현 가능성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총 응답자
열린우리당	43명(55.1%)	15명(19.2%)	20명(25.6%)	78명
한나라당	1명(1.5%)	61명(88.7%)	6명(8.8%)	68명
민주당	1명	8명	-	9명
민주노동당	-	5명	-	5명
국민중심당	-	-	1명	1명
무소속	-	-	1명	1명
계	45명(27.8%)	89명(54.9%)	28명(17.3%)	162명

이를 반영한 듯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묻는 설문에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27.8%(45명)에 불과한 반면 가능하지 않는 응답은 54.9%(89명)로 절반을 넘었다.

◇ 정당별 시각차 ‘극명’ = ‘개헌의 필요성’과 ‘참여정부 내 개헌 가능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양쪽 모두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우리당 의원 중 91.0%(71명)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응답자의 77.9%(53명)

가 4년 연임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5.9%(4명)에 불과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개헌 시나리오 2년전 안희정이 작성”

한나라 박계동 의원 주장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은 현정권 실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의원총회에서 ‘정

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5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본 방향’이 제시돼 있다. 특히 올해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으로는 ‘개혁국면, 대선국면 관리’라고 꽤 있으며, 고려사항으로 ‘여·야당 대선주자 관리’와 ‘개헌 논쟁을 통한 시민사회와 민주적 사회참여 확대’라

는 내용이 명시됐다.

결국 이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개헌 카드’를 내놓았을 것이다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문건은 안희정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의 한 실무자가 지난 2005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박준영 지사 ‘개헌 지지’

광역단체장 중 처음

박준영 전남지사가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헌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10일 ‘개헌을 지지하는’는 제목으로 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정·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지사는 올해 대선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관되게 “도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정치·권력을 두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날 돌연 개헌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일각에서는 무슨 ‘변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일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성명서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짐이어 조합장까지 매년 선거를 치르는 데에 국가적 에

너지를 소비하고 이웃까지 분열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시기가 큰 차이가 없는 이번에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9일 개헌 제의에 대해 민주당이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대책 구성 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박 지사의 지지 표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도 관심거리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사립 교사 임용고시 특강

- 대상 : 중등교사<전과목> 해당됨
- 시험과목 : 면접, 수업실기, 교과교육론
- 시험실시 : 1월과 2월 사이에 약(5~7회) 볼수있음

## 사립교사가 될수있는 최고의 기회

■ 서울 공평학원과 광주·전남고시학원 동시에 강의함

■ 교육행정직 수도권 사립학교 특강강의 ■ 개강 1월 13일 오후 2시

## 전남고시학원

상담 전화 ☎(062)222-5105, 017-631-4467

전남여고맞은편  
(광주 동부경찰서 뒤)

###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운행계획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계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일·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 광주은행 : 001-107-228160 ◆ 농 협 : 617-01-108334

\* 예금주:(주)광주일보사

## 급매

- ◎ 서석고 정문앞
- 장원빌라
- ◎ 81평 매매 2억
- (분양가 3억6천)

연/락/처

011-609-1245

중국대학 입학은 리틀차이나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대학 입학

북경어인대 / 북경외국어대 / 북경사범대 /

상해사범대 / 상해외국어대 / 홍동사범대 /

상해재경대

- 2002년 제 1기 모집 시작으로 총 59명 합격

- 6개월 입학준비반 수료생 100% 합격신화

2008년 5월 본고사 대비

북경대 / 청화대 / 북단대 / 교통대 / 인민대

- 2학기는 한국에서,

1학기는 중국에서 입학준비

- 중국어, 영어, 수학, 역사, 개발 등

입시 과목 전문선생님 강의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1월 13일(